

정치권, 추경 편성 한목소리... 규모·내용은 이견

국힘 “민생·경기 활성화 예산 상반기 70% 집행 이후 검토” 민주 “지역화폐 증액·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해 경제 숨통 틔워야”

사사건건 갈등만 반복하던 여야가 모처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장 민생·경기 활성화 사업 예산을 1분기 40%·상반기 70%를 집행하는 등 배정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고 이후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분기 뒤에 (추경) 필요성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추경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통상 1분기에 170조원의 예산을 집행하지만, 예산의 40%를 조기 집행하면 추가로 100조원 이상을 투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위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추경의 경우 조기 집행 후 민생 회복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족한 분야를 검토하겠다는 야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경에 선을 그어왔던 야당이 점차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러한 추경 검토 기류는 조기 집행만으로는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위기 의식과 함께 한국은행의 의견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추경은 내수 진작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추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야·정 협의해야 한다”면서 “지역화폐 추경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능한 한 빨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추경 편성을 통해 경제주체의 심리를 끌어올려 경기 회복에 청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외적인 경제 불안 요인에 더해 내란 상황까지 겹쳐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렵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으로 우리 경제에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추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 2조원 증액을 요구했고, 증액이 무산된 만큼 추경을 통해 2조~3조원 정도가 투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회의에서 “소멸성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경기 부양은 물론 내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도 지급해 국민 경제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지난 20일 2차 민생입법과제의 하나로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방안을 담은 지역화폐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같은 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한 배경도 추경 편성을 압박하려는 의도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대표발의자들이 21일 오후 국회 의원과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폭동 조장’ 국힘 윤상현 제명 결의안 제출 야 5당 “체포돼도 훈방 발인, 법원 습격 정당화 논리 제공”

야권은 21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 지난 18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답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자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

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은 이날 결의안에서 “윤 의원의 ‘월담 훈방’ 발언은 시위대를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해당 발언은 유튜브를 통해 삼시간에 전파돼 법원을 상대로 한 습격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당시 폭동에 가담한 90명이 내란죄, 국

헌문란, 소요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면서 “윤 의원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옹호하고 고무하는 등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야당의 윤 의원 제명 추진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의 입을 막고, 행동을 막기 위한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소신에 따라 발언하고 행위를 한 것이 국회법이나 헌법을 위반한 것인가”라며 “그런 식으로 따지면 12개 범죄 혐의로 5개 재판 받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명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상목 “국정협의회 가동해 추경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정부 간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지속해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와 정부 간 논의를 전제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통화정책 외에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라

며 15조~20조원 규모 추경을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은 중심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 산업 근로시간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도 촉구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해서는 “미국 행정부의 통상정책 등 전환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내수·고용 등 국내 경제가 여의찮은 상황에서 대외충격까지 더해지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정부는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검찰도 수사...민주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 “檢, 황금폰 증거 인멸 교사”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1일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특검을 통해 신뢰를 잃은 검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태균씨는 지난 2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황금폰’ 폐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의 ‘증거인멸 교사’로 규정하며 황금폰을 폐기해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연결고리를 은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장원지검의 명씨 수사에 대해 감찰을 해야 한다”며 “감찰이 증거인멸 교사를 했으면 경악할 일로, 낱말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감찰 수사가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서 멈춰 섰다”며 “이들이 직권남용을 해서 수사를 무마했는지 여부를 김건희를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재봉 의원이 “감찰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온갖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특히 김건희에 대

해서는 소환조차 통보하지 않았다”며 “이래서 김 여사 특검법이 다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태영 의원은 명씨의 통화 녹취 제보를 토대로 김 여사가 창원지법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염 의원은 “해당 녹취에서는 ‘사모’라고 표현된 김 여사를 세 차례 언급하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모’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는 한탄을 반복했다”며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23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명씨 수사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의 연관성을 철저히 밝혀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